

군산항 발전 위해 직접 듣고 발로 뚫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민생현장 간담회 열어 새만금 신항 사업 철저·안전점검 당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도내 항만해운의 중심지인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섰다. 김종훈 부지사는 지난 8일 군산항 5부두 C(대합통운)을 방문해 '군산항 발전을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겸 석도국제웨리(주) 대표이사, 고봉기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위원장, 고현정 군산대 물류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군산

항 관련 산·관·학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군산항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민생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나정호 전북연구원 박사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설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2월 비수도권 유일의 특송화물 통관장을 개장해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발전을 위한 복합물류 비즈니스 앵커기업 유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토론에 참여한 김상겸 석도국제웨리(주) 대표이사는 "군산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올해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에 맞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특송물류 유치는 큰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곧 산·관·학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항로 다변화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군산항 활성화 방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며,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과 군산항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종훈 부지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과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김종훈 부지사는 "통관장 운영은 군산항과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통관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세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어 "신항만은 2026년 개장을 위해 여러공정이 신속하게 추진중이지만 절대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8일 군산항 5부두 C(대합통운)을 방문해 민생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 17일까지 연장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7일까지 1주 연장하고 온라인 예코이플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예코이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예코이플

(www.ecoemai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일은 내 가족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가 있는 소비행위"라면서 "신청 기한이 연장된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한시적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이후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진을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11개 시·군(남원, 무주, 순창 미선정) 중 매입품종 확대를 희망하는 시·군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1개를 추가로 선정(2→3개)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2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일부 농가의 타격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 결정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 차질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농식품부에 매입품종 확대를 건의하고, 농식품부에서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김재훈 기자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전북형 복지정책발굴추진단' 운영

복지정책발굴추진단 킷오프 회의...고복지특례 발굴 전력투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내 22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복지전문가 11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복지정책발굴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정책발굴추진단은 전북자치도 정책방향에 맞는 복지정책과 전북만의 복지특례를 발굴하고 새로운 복지수요 및 쟁점사항 분석으로 국가사업화, 정책건의, 민생시책

발굴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개 분야별(지역복지, 가족·노인·장애인복지)로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민생현장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및 현장의견을 듣고 분야별로 복지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첫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례와 수시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며,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복지

정책은 6월 포럼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사업화를 위한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도 복지부서 현안사업인 사회서비스산업화, 고령친화산업, 복지특례, 민생시책 등과 함께 5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자원 플랫폼 운영'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앞으로 분야별 실무회의는 현장의

소통창구가 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제를 발굴·제시하고, 현장전문가들은 각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발굴 과제를 검토해 보완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환류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의 과장과 팀장이 실무회의에 참여해 추진과제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시군 등과 청소년 정책 협력 강화

업무담당자 회의... 5월 시행예정 청소년 박람회 협조 요청

전북자치도가 지난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관계기관 청소년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와 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북자치도 청소년정책 현황 △도 자체 청소년 주요사업 △정부 합동평가 등 도·시군 협력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활동진흥센터 협조·요청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도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전북자치도 청소년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앙 및 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절차 준수 및 정산 철저 당부와 청소년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특히, 올해 5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자치도 청소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정책과 사업의 성패는 탄탄한 기본계획 수립과 꼼꼼한 관리, 그리고 사후관리는 필수사항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업무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들의 역량결집을 통해 전북자치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특사경, 주요 관광지 및 유명맛집 위생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주요관광지 및 유명맛집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봄 나들이철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SNS) 또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맛집 등 식품접

촉업소 10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냉

장보관하는 등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물·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 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